

자동차융합기술원 방만운영 '도마 위'

도의회 경산건위, 행정사무감사... 자본 감식·베껴쓰기 등 '맹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방만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2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2023년 11월에 통과됐지만 전액 30대 상용

차 핵심부품 및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도비가 3년간 약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조직개편과 올해 끝나는 사업이라는 핑계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사업의 수입이 29억에서 10억, 10억에서 4억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점과 공모 실적도 해마다 낮아지

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국외출장 보고서를 살펴보니 타기업의 기고문을 베껴 쓴 보고서가 발견됐으며, 특히 시사점을 베끼는 것은 국외출장을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임직원의 출장여비가 과도한 점을 언급하며, 해마다 2억 원에 가까운 출장을 다니는 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 향후 관행적 출장은 삼가고 도내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장들로 계획해달라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은 매년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직원 현원이 부족한 점, 해마다 채용인원보다 퇴사자 수가 더 많은 점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일의 성과와 효율로 이어질 수 있게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를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개최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의장 박일)는 1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26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읍시의회가 개원 후 제300회기를 맞는 오늘이 있기까지의 정취를 적극 지지해 주고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을사년(乙巳年)을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5년 시장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장 연설이 있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한신미 의원은 '세대 간 공감으로 여는 치매 친화적 미래!' 라는 주제를 통해 치매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촉구하였고, 김승범 의원은 '구조초 지방정부의 계획적 한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통해 효율적인 사계절 활용방안 마련을 강조했으며, 김석환 의원은 '천년한 문화도시 정읍을 꿈꾸자!'를 통해 문헌(文軒) 도시로서의 정체성 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안전심사,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 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 (의장 박병대)가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3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5일부터는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군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두레 의원이 '지역행사 추진시 대화용기 사용 활성화 촉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고, 김일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병대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 동안의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성과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세심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7공구에 RE100산단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정부가 최근 그곳에 장기임대농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군의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12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중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8장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임혁백 고령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중국 경제의존도 낮춰 분산 전략 고려를"

전북 백년포럼 제18강... 임혁백 고령대 명예교수 "동북아 공동체 가교역할 수행해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2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중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8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임혁백 고령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미중 패권전략을 영역별로 심도있는 분석과 비교를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외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미중 양국 간의 대립은 경제, 군사, 기술,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지정학을 통해 지정학을 극복하고자 했고, 미국

은 이를 맞대응하기 위한 '재균형(Retbalancing)전략'으로 지정학을 강화해 지정학을 저지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양국의 관계가 공조를 넘어 자국 중심의 안정체계를 선호함에 따라, 위협분산을 위한 헛정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나친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춰 투자와 교역을 미리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히 "만약 양국이 반대로 상호협력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 공동체를 위한 가교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미중패권경쟁은 우리나라와 전북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美 대선의 결과가 나온 중요한 시점에서, 전북이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과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전북 백년포럼은 26일 오전 8시에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강사로는 정동영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서 전북 대도약과 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신보 하위직급 기본급여, 최저임금 못 미쳐"

나인권 도의원, 신용보증재단 행감서 질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은 12일 전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하위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을 두고 있는데 이 중 5급 이하 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현재 6급 직원이 5명 근무하고 있는데 6급 직급은 상한액조차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



대를 역행하는 급여테이블"이라며, 하위직급의 임금테이블과 수준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위직급의 기본연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재단 이사장의 성과급은 취임 이후 2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반면, 하위직급과의 격차가 2년 전보다 3배 이상 벌어져 고

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임금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는 구조"라며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나 의원은 "최근 공무원조직에서도 신규직원들의 이탈 가속 원인이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 문제가 있어 서기관급 이상과 사무관급 이하의 급여 인상을 차등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 뒤 "업무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기본급 등을 일괄적인 비율로 인상하면, 하위직급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급여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학교 통폐합 문제 대응 주문, 행감 수감 자료·내용 부실 질타

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행정국·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국 및 감사관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했다.

박정희 의원(군산)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 정밀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어떤 방향의 적정규모 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숙고해 보라"며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변화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공사들이 계획대로 진

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은(진안)은 무주·진안·장수 지역의 시설공사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및 답변 내용의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교육청의 감사 행정은 잘못된 업무 처리나 예산 사용 등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감사관이 교육 현장의 사고나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주기적인 사전 예방 활동 등 적

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상이 발표된 삼봉중학교를 포함한 인근 삼례 지역이 공단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많은 교통량으로 학생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차질 없는 통학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교육청의 수의계약 현황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리스트의 홈페이지 공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자료 공개 등을 충실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안전감찰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부실"

김성수 도의원,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서 위원 과반 대리 참석·형식적 운영 문제 질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개최된 안전감찰전담기구 협의회의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작년 12월 14일 열린 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자 위원 대부분이 위임장도 없는 대리 참석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회 위원에는 14개 시·군 재난안전 부서장(과장) 및 전문기관, 지방공기업 부장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실제 12개 시·군에서 참석한 사람은 과장이 아닌 팀장이었고, 전문기관 역시 5개 기관에서 협의회 위원이 다른 사람이 참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 명단과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의에 제출된 참석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협의회 위원

7명만 참석해 조제가 규정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더욱이 도민안전실은 대리 참석에 대한 위임장도 없으며, 대리 참석이 법률적 가능성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안전감찰 연간 계획(안)과 전북 대권구조물 안전감찰기준(안) 등 2건 안건이 의결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시간에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는 제8차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 일정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 협의회 결과 보고에 참여한 사진에도 없었다. 결국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행정부지사의 서명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제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실무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한 민간 전문가도 전혀 위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독도 일원, 보다 친숙하게 출입 가능'

민주김윤덕 의원,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되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카메타리 촬영이 거부되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

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하여 규정된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자연유산법'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